

올해만 13차례...광주·전남 잦은 지진 왜?

연평균 4.2회 불과했는데... 3배 급증에 지역민들 “혹시”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때 땅속 쌓인 에너지가 주원인 우려할만한 큰 단층 없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 낮아

을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평년 대비 3배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작은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지하에 쌓인 에너지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다행히 광주·전남에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단층이 없는 만큼 향후 인명피해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진 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5회에 불과했던 지진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252회 발생했다. 올해는 이날 현재 117회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지진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3회, 전남 18회 등 연평균 4.2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특히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 2회, 전남 11회 등 연평균의 3배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의 연도별 지진 발생횟수는 지난 2012년 광주 0회, 전남 2회, 2013년 광주 1회, 전남 4회, 2014년 광주 0회, 전남 5회, 2015년 광주 0회, 전남 3회, 2016년 광주 1회, 전남 4회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올 들어 갑자기 지진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는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지진이 잇따르면서 광주의 한 구청 직원들이 지진 발생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에 지진이 갑자기 늘어난 현상에 대해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경주 지진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광주 3회, 전남 14회 등 총 17회의 지진이 났다.

경주지진은 부산과 울산을 지나는 양산 단층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등의 원인에 의해 압력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단층은 지층이 끊기면서 생긴 것으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양산 단층 등을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활성단층은 오랫동안 힘을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 밀려나 당기듯 움직이고 이때의 충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경주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를

흔들어놓고 이때 쌓인 에너지에 의해 땅이 움직이면서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기술로는 땅에 쌓인 에너지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에너지의 방출시기도 알 수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우남철 기상청 지진전문분석관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그 당시 발생했던 에너지가 땅속에 쌓여있다.”라면서 “이때 축적된 에너지가 한계치를 넘으면서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분석관은 “축적된 에너지가 다 소모됐는지 확인할 수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2.0 규모의 지진은 어느 지역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따로 지진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큰 단층이 없어 향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 관측소는 150개소가 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에는 총 24개소가 설치돼 광주 2개소와 전남 22개소가 있다. 기상청은 올해 안에 전남 6곳의 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등산관측소는 전국 유일하게 지구 반대편의 지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광역 지진계가 설치돼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당시 미국 언론들의 시각 민주주의 투쟁으로 보지 않았다

5·18재단, 당시 보도동향 분석 ‘국지적 폭동’으로 보려는 경향 ‘민주주의’ 단어 46회 불과 ‘반란·폭동’은 145회나 등장

1980년 5월 당시 미국 언론은 5·18 광주항쟁을 민주주의 투쟁으로 보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5·18 관련 해외자료 수집 및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19일 5·18 당시 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80년 5월18일부터 6월 말까지 주요 미국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P’(Associated Press), ‘뉴스 위크’, ‘타임’의 5·18 관련 기사 19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매체들은 광주항쟁을 광지역차별과 당시 야당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체포에 불만을 품은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국지적 폭동’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전두환 신군부를 군사적·외교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카터 행정부의 입

장이 보도관점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관련 보도와 비교했을 때 천안문사태 기사의 경우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가 327회 등장하지만 5·18 관련 기사에서는 46회만 등장한다. 반면 ‘반란’(rebellion)·‘폭동’(riot)은 모두 145회나 등장하는 등 광주항쟁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매체들 이후 미국 언론이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책임론과 이에 따른 반미주의의 확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매체들이 광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수부대의 유혈진압으로 명시했고, 북한 개입설을 일축하는 등 사실에 근거해 취재하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주 5·18재단 비상임 연구원은 “당시 미국매체들은 광주항쟁이 발발하게 된 한국 고유 정치·사회적 배경 보다는 카터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한(對韓)정책 관점에 의존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70대 기초수급자 숨진 지 두달만에 발견

20여년 동안 홀로 지내던 70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이 노인은 매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광주서부경찰과 서구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여·7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김씨가 두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 담당자는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고개 사정’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자 김씨의 집에 찾아가던 것

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에도 복지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99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경기도에서 지내다 지난해 경기도 의왕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김씨는 부양 가족과 근로소득이 없어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주거급여,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로 매월 64만원 가량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만 원을 주택 월세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농성1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이 마지막 외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영기자 young@

충장축제 폭발물 의심 배낭 소동...열어보니 안경케이스만 “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광주충장축제 현장에서 폭발물 의심되는 배낭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9일 광주동부경찰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안전관리과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충장축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던 중 한 금융기관

앞 변방기 위에 놓여있는 폭발물로 의심되는 감색배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탐지견, X-레이 탐지기 등을 동원해 폭발물 진위 여부를 조사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방을 열어본 결과 안경케이스 1개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도의 한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질자원연구원 지진 관측 장비 성능시험조차 안해

지진 탐지 못한 비율 33.7%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그간 지진 관측장비를 성능시험조차 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서울 송파구·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전했다.

최 의원이 전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질자원연구원은 산하 관측소에 설치된 133대의 속도지진계·가속지진계·기록계에 대해 장비성능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였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진 관측기관 중 하나이며, 전국 40곳에서 지진 관측소를 운영 중이

다. 또 기상청 보유 지진 관측장비는 308대 중 264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유 관측장비는 15대 모두가 성능시험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요 지진관측기관 세 곳이 운영하는 456대의 장비 중 성능시험을 받은 것은 44대로,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3.0 이상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질자원연구원 관측소가 이를 탐지하지 못한 비율이 2015~2016년에 33.7%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하며 “성능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치매환자 폭행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재판에

광주지검, 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

증거 인멸한 직원은 구속 기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임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임원 중인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또 2015년 6월 다른 입원환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폭행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다. A씨와 B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